

어민들 협력 이끌어 낸 해상풍력단지 순풍 타나

전남도·신안군·신안군수협·새어민회 해상풍력단지 조성 협약 사업 추진 탄력...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 모델 귀추 주목

신안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인 전남도가 우선 어민들의 협력을 얻어내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향후 민간 투자 유치, 국가 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 뉴딜의 핵심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 신안군수협, 새어민회는 9일 전남형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신안군수협 조합장, 장근배 새어민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맞춤형 어업인력 교육인력 지원과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과 전남형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전남형 상생발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반대로 인해 사업들이 좌초된 바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유사 사례를 검토해 민간발전사 중심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지역 사회가 참여한 전남형 상생발전 모델로 추진해왔다.

전남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앞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상생 즉 주민 수용성

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전남형 상생발전 모델이 정부 정책과도 부합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특화모델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블루 이코노미' 중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며, 올해부터 2030년까

지 48조5000억원을 투자해 450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12만개를 창출하게 된다.

이 사업은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목표 달성을 비롯 해상풍력 산업 발전,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폭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 뉴딜의 핵심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또 해상풍력 제조업체 유치와 전남도내 해상풍력

연관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시화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상생협약은 전남의 비전을 공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염원한 지역주민과 어업인 덕분이다"며 "도민 모두 힘을 모아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세계 최고의 발전단지로 만들고 목표, 영암, 신안 등 전남 서남해 지역을 해상풍력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수협조합, 새어민회는 9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및 전남 서남부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새어민회 장근배 회장, 신안군수협 김길동 조합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전남도, 코로나19에도 '美 농수산물 수출' 최대 42.6% 증가 5390만 달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 7월 기준 전남도의 농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6% 증가한 5390만 달러를 기록, 수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과 유자차, 음료, 배, 전복 등이며, 최대 수출품인 김은 3751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56.0%가, 유자차는 55만 달러로 70.8%, 장류는 52만 달러로 38.8%, 주류는 46만 달러로 8.3%가 각각 증가했다.

미국 농수산물 수출은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1000만 달러 이상 증가를 보여왔다. 현재 미국내 전남도 상품판매장은 LA 4개소, 시카고 1개소, 뉴저지 1개소 등 6개소를 운영 중이며, 미국 수출 효과에 힘입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2개소와 대만 1개소를 개설했으며, 올 상반기 말레이시아 1개소와 베트남 1개소를 열어 세계적으로 총 11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 오는 11월 미국과 일본에 각각 1개소, 12월에는 태국에 1개소를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미국 수출확대를 위해 오는 22일 미국 상품판매장 운영사인 한남체인을 비롯 현지 운영사인 KHEE TRADING과 농수산물 30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남체인은 세계에서 재외동포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7개의 대형마트를 운영해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전남도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광주시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에 건의안

광주시의회가 오는 12월 개최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경우 수익성의

이유로 예타조사를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꼽힌다. 대전시가 추진중인 공공의료원 건립사업도 이 같은 이유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광주와 울산, 대전에는 공공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민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의료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의료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다"면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비용과 편익 측면보다는 사회적 가치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균형발전지표 개발 조례 제정

시군별 낙후도 반영...각종 사업시 가점

전남 각 시군의 낙후도 등을 반영한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고, 공모 사업 추진 시 평가항목에 가산점을 주도록 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낙후도와 낙후된 지역의 성장촉진 등을 반영한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하도록 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시군 균형발전 점수 반영을 수 있도록 사업별 평가지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에 가산점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균형발전지표를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평가비율

을 높여 적용하고 시와 군 지역을 분리해 평가하는 방법 등 도내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조례안은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이 오는 18일 제346회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균형발전지표 개발과 활용에 관한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된다고 도의회는 전했다.

이현창 위원장은 "지방소멸위기 속에 산업화, 도시화에서 비켜난 전남 시·군은 지역 성장을 꿈꾸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각종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도내 지역 간의 격차는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전남의 중장기적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남형 균형발전도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을 바탕으로 전남형 균형발전지표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개 선정

생활기반·환경문화 등 80억원 투입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총 15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사업 8개와 환경문화 공모사업 7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비 72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입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올해 국비 지원액 61억원보다 18% 늘어난 것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생활기반사업의 경우 ▲도로 확·포장 등 7건 ▲저수지 보수·보강 1건이며, 환경문화(공모)사업은 ▲누리길 조성 4건 ▲여가복지 조성 2건 ▲경관 조성 1건 등이다.

환경문화(공모)사업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신청한 58개 사업 중 총 8개가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광주시 사업이 7건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생활기반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4건을 선정하는데, 이 중 광주시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쾌적한 휴양공간이 조성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주민지원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향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2020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내포안에서
싹쓰리
취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2020. 09. 14 ~ 09. 25.

<http://www.greencarjob.co.kr/>

온라인채용 박람회 참여방법

Stage 1 원하는 채용기업 확인

Stage 2 채용 서류 제출

Stage 3 영상 면접 제출(1차)

Stage 4 실시간 면접 진행(심층)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GIGA 광주클러스터진흥원, 국제케어센터

후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광역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REPI 지역고용정책연구원